



Redesign our future

The UN SDGs: 5 years and the next 10 years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미래의 재설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난 5년과 향후 10년

국문요약

많은 국가들은 2015년 발표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보고서는 지난 5년 간 SDGs 이행의 객관적 평가와 향후 10년 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토대로 SDGs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6개의 핵심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SDGs 이행을 위하여 정부, 민간,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 기관 및 협의체와 실행하는 협력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SDGs의 현재 진행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국가별 사례를 사용한 정량적 방법론을 통해 6개의 핵심 메시지를 도출하였다.

1. SDGs 간 상호관계 재정립

문제의식. 전 세계적으로 SDGs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이 문제는 SDGs의 3대 기둥인 경제, 환경,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17개의 목표 간의 상호관계에도 해당된다. 정책 결정자들은 단기적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장기적 관점으로 사회 및 환경과 생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분에 소홀하였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체제 속에서 특히 민간 부문은 사회·생태적 지속가능이라는 가치보다는 단기적 경제 효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소득 격차 확대와 고용 악화로 고통 받는 시민 사회 역시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기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우선으로 여긴다. 이는 단기적 경제 이익과 장기적 사회·생태계 목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DGs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목표와 장기적인 사회·생태적 목표 간에는 시너지 및 상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사회·생태적 가치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궁극적으로 더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국의 정상과 의사 결정권자들은 단기적인 경제발전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이 점을 간과해왔다. 이는 결국 사회, 환경, 그리고 장기적 성장에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에서 파생된 부작용을 분리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목표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권고사항. (1) SDGs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 및 생태적 목표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경로임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SDGs의 이행에 따르는 단기적 경제 비용과 장기적 사회·생태 이익 간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본 보고서는 의사 결정권자가 사회·생태적 목표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목표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2)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SDGs 각 목표들 간의 포괄적 순서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단기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개발 계획에서 벗어나, 장기적 사회·생태 이익과 단기적 경제이익 사이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포괄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럽의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등 단기적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 가치와 조화를 이룬 좋은 예이다.

2. COVID-19 위기 진단 및 SDGs에 미치는 함의

문제의식. COVID-19은 전 세계에 역사상 유례없는 충격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경제적인 분열을 초래하였다. 특히 보건의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최빈국은 더 심한 타격을 받았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단순히 종전으로 회귀하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보다 과감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전 세계적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초월한 리더십과 굳건한 다자주의의 역할이 핵심적이나 현재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된 채 통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COVID-19이 전 세계 안보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OVID-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그동안 어렵게 일군 성장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COVID-19의 경제·사회적 충격은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세부목표의 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권고사항. (1) SDGs가 COVID-19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동반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개발에 대한 의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이해 당사자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2030년 의제의 17개 목표는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국가들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 전문성, 기술과 금융자원의 공유를 도모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2) 현재 전 세계가 처한 전무후무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주의를 공고화한다. COVID-19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UN 및 세계보건기구(WHO)을 위시한 국제기구들의 강력한 지도력, 협력,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이 필요하다. (3) 각국 정부들은 보건분야 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과 공공재원의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COVID-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공보건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고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늘리는 등 건전한 보건 및 경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SDGs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 재조정

문제의식. 현재 시장 경제의 민간 부문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민간 부문은 단기적인 경제 효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와 고용 불안 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먼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사회·생태적 위험은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앞선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정책 입안자들 역시 단기 성장 위주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단기적 경제 효율만을 추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사회·환경 목표를 고려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은 재정 정책을 통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 사회는 SDGs의 비전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권고사항. (1) 경제적 효율성이 사회 통합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공공 부문 및 시민 사회가 그 역할간 균형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인류, 번영, 그리고 지구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뜻한다. 공공부문은 사회·환경 관련 목표를 위한 장기 투자를 늘리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부문은 단기적 경제적 이득을 위한 투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시민 사회는 사회·환경적 목표를 위한 공공부문의 장기 투자에 대한 정치적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SDGs 달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공공 부문과 시민 사회가 민간 부문과 협력할 때 가능해진다. (2) 모든 SDGs 이해당사자들은 각 분야에서 관련된 이행지표를 채택하고 체계화하는 데 투자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 부문은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토양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이하 ESG) 지수는 사회·환경 관련 비용과 이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데, 이를 채택하면 향후 SDGs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투자를 정량화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ESG를 확산시키면 민간 부문에서도 SDGs의 이행시 단기와 장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이해당사자 역량강화 및 참여유도

문제의식. SDGs와 관련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공공 부문은 장기적 자원 배분에, 민간 부문은 단기적 자원 배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민 사회, 여성,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의사는 잘 반영되지 못했다. 더불어 상향식 접근 방식이 SDGs 이행 전략에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를 SDGs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정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실질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분야가 단기적 경제목표와 장기적 사회·생태적 목표 간의 균형적 자원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부문 및 시민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

권고사항. (1) 공공 부문은 SDGs 관련 자원 배분을 위한 절차, 혹은 제도에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SDGs를 국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거버넌스 체계 내에 SDGs의 자원 배분이 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공부문 정책입안자들은 SDGs에 대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2) 민간 부문은 장기적인 사회·생태부문에 대한 투자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포착하고, ESG 지수에 근거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수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SDGs 목표에 맞춰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민사회는 관련 이해 당사자, 전문가 집단, 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를 통해 SDGs를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4) 효과적인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의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긍정적 파트너십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파트너십 모델은 자원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위하여 파트너십 당사자 간의 협력 및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SDGs의 합의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모델은 각 이해당사자 스스로 합의점을 구축(1단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점 구축(2단계),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공고화(3단계), 파트너십의 평가(4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5. SDGs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문제의식. SDGs가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SDGs를 지역화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통계 정보의 부족으로 그 후속 조치가 정기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발간한 보고서들도 대부분 SDGs 목표 및 세부 목표들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웰빙과 SDGs의 이행을 측정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기존 접근 방식을 종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간과 사회의 웰빙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다. 국내총생산 등 여러 경제적 통계 지표 외에도 인간의 삶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OECD Better Life Index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OECD 국가들 간의 웰빙 수준을 비교는 하되 해당 국가의 순위를 매기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와 베르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모든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SDGs 지수와 현재 진행상황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목표 및 세부 목표들 간의 시너지 및 상쇄 효과를 완전히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자발적국별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s, 이하 VNRs)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VNRs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한 것으로 UN 회원국들이 SDGs의 이행을 공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UN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이 SDGs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한 중심 플랫폼 및 효과적인 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부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VNRs의 질적·양적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국가별 VNRs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경향은 나라마다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 상승효과와 절충관계를 분석하는 작업도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VNRs가 주로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반면, 정량화 가능한 SDGs 지표와 정량화가 어려운 사회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SDGs 이행의 질적 평가 및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권고사항. (1) VNRs과 함께 웰빙 및 SDGs 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접근법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SDGs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사회·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탐구하고 단기적 경제발전 위주의 틀을 깨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2) 모든 UN 회원국이 SDGs를 국가 예산 절차에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된 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요건은 SDGs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예산과정에 기반하여 VNRs에 담긴 자발적공동보고지침(Voluntary Common Reporting Guidelines)을 따르기 위해 필요하다. (3) 현재 VNRs 지침은 UN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과 총회에 의해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시너지와 상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과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4) VNRs은 보다 질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간 정량적 지표에만 집중해 오던 것을 보완해야 한다. (5) SDGs의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및 학계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평가(review of reviews)”를 수행 할 수 있다.

6. 경험의 공유

문제意識. 약화된 글로벌 연대와 국가 간 경험 공유의 부족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경제 개발 단계에서 겪었던 것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였다. 국제기구의 리더쉽은 쇠퇴하고 국가 간의 협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도 관찰되고 있다.

권고사항. (1) Guterres UN 사무총장에게 SDGs 이행 경험을 검토하고 공유하면서 2030년 이후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2025년 특별 SDGs UN 정상회의를 소집토록 제안한다. (2) 모범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설립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 사회의 이해당사자 간 지식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정부나 국제기구 등과 같은 기존 참여자들이 지닌 한계로부터 오는 간극을 메우는 역할도 할 수 있다. (3) 보다 강화된 다자주의의 역할을 통하여 국가들 간에 전 세계적 위기상황을 탈정치화 할 필요가 있다. 현 COVID-19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국가 간의 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여러 국제기구들의 지지 속에 UN 사무총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전 세계적 유행병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4)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 자원분배를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는 자원 재분배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와 국제기구의 협력이 요구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

- (1) SDGs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쇄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옵션 및 조건을 확인하는 글로벌 연구 이니셔티브가 관련 연구 기관 및 학계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경제 목표를 SDGs의 사회적·생태적 목표와 통합하고 단기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고안하는 것이다.
- (2) SDGs 이행의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은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이익단체가 속한 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플랫폼은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들이 마련한 정규 절차에 의해 생긴 한계를 보완하고 간극을 메울 수 있다.
- (3) Guterres UN 사무총장에게 2025년 특별 UN SDGs 정상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이는 SDGs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2030년까지 SDGs 이행 전략을 수립키 위한 자리이다.
- (4) 공공,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긍정적인 파트너십은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자원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국가·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은 국가 개발 계획이나 전략에 SDGs를 포함시키고 SDGs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단기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5) 민간부문에서는 SDGs 관련 분야를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고, 단기 경제 목표가 미치는 사회적·생태적 영향을 측정하는 ESG 지수를 채택해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SDGs의 장기 투자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6) UN DESA와 총회는 현재의 VNRs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들 간의 시너지와 상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과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지난 5년 간의 SDGs 이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17개 SDGs는 [그림 1]에서 보여주듯 다각적인 관점에서 균형있게 달성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SDGs 각 참여자들에 대한 제언 외에도, 지난 5년 간의 SDGs 이행에 따른 결과 및 향후 10년 간 예상되는 SDGs 달성 여부 등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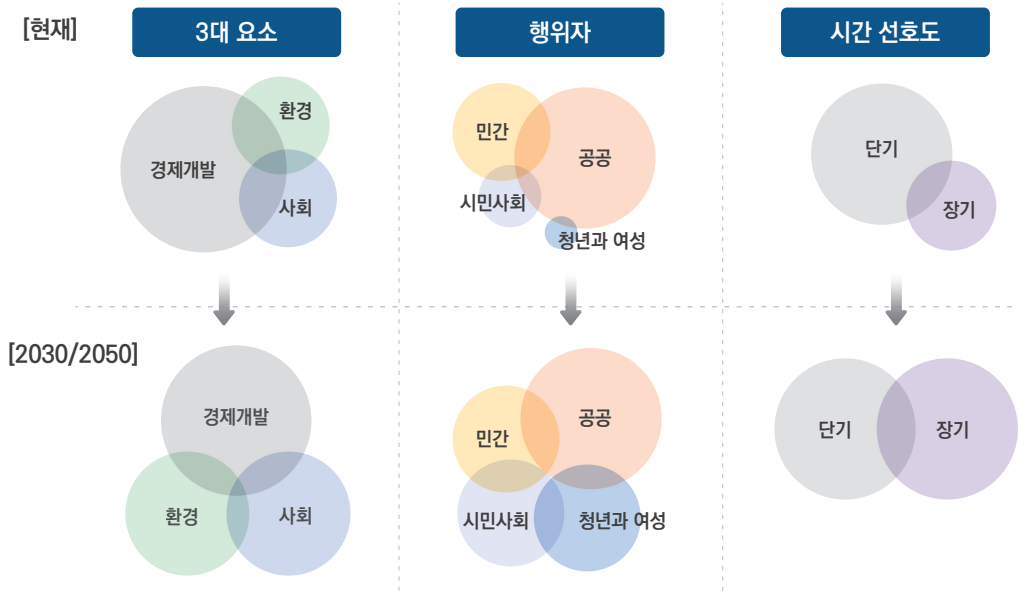


그림 1. SDGs의 3대 기둥, 참여자, 시간 선호도 재조정

5년 간의 SDGs 이행 결과를 볼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첫째,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와의 양립을 무시한 채 단기적 경제 성장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현재의 정책 추진 방향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제가 부재한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특히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SDGs 참여자들간의 균형은 더 이상 공공 부문을 우위에 두지 않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사실, 상향식 접근 방식은 거의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이론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매우 크다. 게다가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상황은 협동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청년과 여성들은 소외되어 왔다. 셋째, 단기적인 경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원의 잘못된 분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을 통한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소진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현 COVID-19의 근본적 원인은 기존의 성장 위주 패러다임과 부적절한 자원분배에 있다. S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단기적 이익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은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와 SDGs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의 쇠퇴, 국제협력의 약화, 그리고 선진국들의 성공사례 공유 부재는 SDGs의 이행과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려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다음은 각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제안이다.

첫째,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각국은 SDGs를 국정 운영 목표로 만들기 위해 국가발전계획이나 전략에 SDGs를 반영할 수 있다. SDGs 이행 전담조직을 정부 내 설립하는 것은 SDGs의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나라에 그러한 SDGs 전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UN DESA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제출한 VNRs의 형식과 내용은 상당히 상이했다. 뿐만 아니라, 전담기관은 향후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SDGs 이행에 대한 양질의 분석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또 다른 역할은 SDGs 이행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공공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이해당사자들이 SDGs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SDGs 달성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 부문은 SDGs와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의 설계와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업은 ESG 지수를 채택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적과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SDGs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ESG 지수가 확산되면 민간 부문에서는 SDGs의 장기적 영향과 비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의 비용과 효과를 정량화하고 측정하는 일이 일상적 업무로 자리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SDGs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 여성 및 청년의 피드백은 진척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의사결정자들이 SDGs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전문가 및 학계의 참여를 포함한 SDGs 이행에 대한 국제적 평가 과정은 앞서 언급한 ‘평가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SDGs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SDGs의 가치에 전념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번영 그리고 지구”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관점에 기반하여 우리의 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집필진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김숙 상임이사

최성주 외교안보실장

박일호 경영행정실장

이병용 기획정책실장

임채은 인턴

박민정 인턴

프로젝트팀

정태용 교수 (프로젝트 책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정내권 대사 (국가기후환경회의)

곽주영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태인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빅데이터연구소)

김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문종우 연구원 (연세대학교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박형근 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